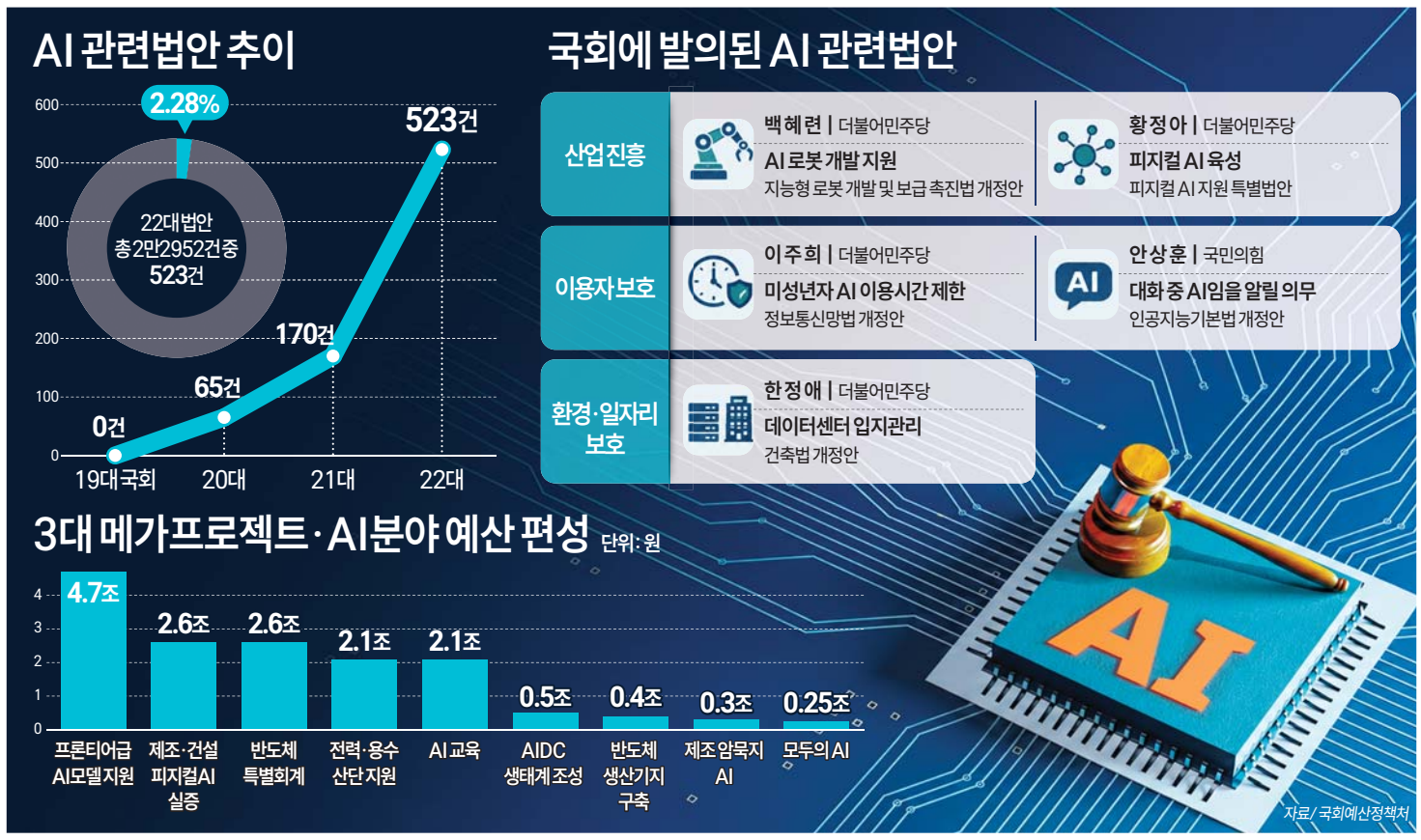
AI 법안 523건 쏟아졌다… 산업 육성·사회적 안전망 과제

AI 3강으로 가는 길

❷ 국회, 법률 제·개정 속도

인공지능, 입법부 핵심 의제로 부상
산업 진흥·오남용 방지 법안 잇따라
내년 AI 예산, 올해보다 97.2% 늘어



이재명 정부가 'AI(인공지능) 3대 강국 대한민국'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입법부인 국회는 다양한 산업에 접목될 인공지능 관련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AI 시대에 소외되는 계층이나 분야를 보호하고 기술 진보가 몰고 오는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에 힘 쓰는 중이다.

◆19대 국회 '0'건에서 22대 중반 '523건'으로 AI 입법 관련 쏟아져

'대(大) AI 시대'를 맞아 국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고 있다. 17일 오전 7시 법률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인공지능'을 검색한 결과, 임기 절반을 지난 22대 국회에서 법률안명·제안이유·상세내용에 인공지능이 언급된 법률안은 총 523건이다. 22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발의·처리된 법률안의 수가 2만2952건인 점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 관련 법안의 비율은 2.28%에 달한다.

21대 국회에선 똑같은 조건으로 인공지능 관련 법안이 총 170건 검색됐는데, 21대 국회의 인공지능 관련 법안 비율은 0.6%에 그쳤다. 20대 국회에선 총 65건이 발의됐고, 2012년 임기를 시작한 19대 국회는 인공지능 관련 법안이 한 건도 발의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지난 6일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10월19일 기준 '인공지능'을 언급한 법률 제·개정안은 총 477건으로 ▲AI 발전 67건 ▲AI 융합(AX) 촉진 15건 ▲AI 오남용 방지 102건 AI 안전·신뢰 확보 15건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안을 심의 및 의결하고 정부와 국회 간 입법 중복을 막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처리된 'AI기본법'을 중심으로 법령을 정비한다는 입장이다.

◆진흥부터 규제, 소외 분야 보호까지 다양한 입법 발의

AI 관련 법률 발의 수가 늘어난 만큼, 각각의 법률안이 담는 내용도 산업 진흥부터 규제, AI로 인해 뒤쳐지는 계층과 일자리 보호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이 인공지능 로봇 등 새로운 유형의 로봇 개발에 필요한 정책 지원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이 활성화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및 안전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로봇 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이 발의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휴머노이드 로봇 등 새로운 지능형 로봇의 정의를 신설하고 인공지능 로봇 개발에 필수적인 학습용 데이터 수집·활용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지원안을 담았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 기술력, 탄탄한 제조업 가치사슬, 고도화된 AI 역량을 모두 보유해 피지컬 AI 분야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며 이를 지원하는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은 현행 법 체계가 로봇, 자율주행, 드론 등 각 산업별로 나뉘어져 있어 피지컬AI의 복합적인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등의 진흥 법안을 내놨다.

인공지능을 사용이나 활용을 규제하는 법안도 여럿 나왔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의 확산으로 미성년자의 장시간·심야 이용이 문제되고 있다며,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사용시간대, 이용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대화형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대화 도중 상대방이 인공지능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며 이용자가 장시간 생성형 인공지능과 대화하면 인공지능을 실제 사람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서비스 이용자가 인공지능과 대화 중에도 인공지능과 대화하고 있음을 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인공지능이 몰고 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법안에 담겼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AI 데이터센터가 24시간 가동되는 특성상, 소음·화재 등의 위험을 수반한다며 데이터센터가 주변 환경에 부적합한 경우 건축 허가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기업의 인공지능 도입으로 대량 해고가 발생할 경우 대체되는 업무, 기술 유형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장관이 통계로 작성해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인공지능 등 도입에 따른 해고 현황을 파악하도록 했다.

◆예산도 뒷받침 올해보다 AI 예산 97.2% 상승…신속·과감 추진에 우려도

정부는 총지출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중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인공지능) 분야에 총 21조3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97.2% 상승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프론티어급 AI 모델 지원에 4조7000억원 ▲제조·건설 등 피지컬AI 실증에 2조6000억원 ▲반도체 특별회계에 2조6000억원 ▲전력·용수·산단 지원에 2조1000억원 ▲AI 교육에 2조1000억원 ▲AIDC(AI 데이터센터) 생태계 조성에 5000억원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에 4000억원 ▲제조 암묵지 AI에 3000억원 ▲모두의AI에 2500억원 ▲특화 AI 보안모델 사업에 1000억원 ▲풀스택 AI 팩토리 지원에 1000억원 이 주요 사업으로 담겼다.

다만, 정부 주도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AI 관련 사업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되다 보니 부처 간 협조와 중복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7 예산안 총괄 분석'에서 "정부는 피지컬 AI 관련 데이터 사업과 AI데이터센터 기술개발·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이 다수의 부처와 기관을 통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실증 성과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정부는 피지컬 AI 관련 데이터 사업과 AI데이터센터 기술개발·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이 다수의 부처와 기관을 통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실증 성과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